

2009 국가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9. 7. 25 시행)

I.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다.
 - ②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 ③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첨부서류에는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④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후, 대통령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한다.
- (답) ④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위원장이 하지만, 대통령 등에게 송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장이다. ①②③은 국회법상 모두 맞는 지문이다.

<참고> 인사청문회법 제1조 (위원장의 보고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친 임명동의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② 의장은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009 7급 선행정학 p.845

2. 전자정부의 미래 모습을 나타내는 요인들을 모두 고르면?

- | |
|---|
| ㄱ. Zero-Stop 서비스
ㄴ. 전자정부 대표 포털
ㄷ. 접근수단의 단일화
ㄹ. 조직구조·프로세스 혁신
ㅁ. 부처별·기관별 업무처리
ㅂ. e - Governance 구현
ㅅ. 정부중심의 전자정부
ㅇ. 백오피스와 프론트오피스 간격 확대 |
|---|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ㄹ, ㅂ
 - ③ ㄴ, ㄹ, ㅂ, ㅅ
 - ④ ㄴ, ㄹ, ㅂ, ㅇ
- (답) ②

- ㄱ. zero-stop 서비스란 non-stop 서비스를 말한다.
- ㄴ. 전자정보 대표포털은 전자정부의 기본목표로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 ㄷ. 접근수단의 다양화라야 맞다.
- ㄹ. 조직구조와 프로세스 혁신은 전자정부를 통한 리스트럭처링과 리엔지니어링을 말하는 것이다.
- ㅁ. 부처별 별도처리가 아니라 정보의 공유를 통한 원스톱서비스가 확립되어야 한다.
- ㅂ. e-거버넌스란 전자정부를 토대로 하는 전자거버넌스를 말한다.
- ㅅ. 정부중심이 아니라 고객이나 소비자 중심의 정부라야 한다.
- ㅇ. 프론트서비스는 전방영업, 백오피스는 후방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전자정부하에서는 양자간 간격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아진다.

★ 2009 7급 선행정학 p.1275

3.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의(lecture)는 교육내용을 다수의 피교육자에게 단시간에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 ② 역할연기(role playing)는 실제 직무상황과 같은 상황을 실현시킴으로써 문제를 빠르게 이해시키고 참여자들의 태도변화와 민감한 반응을 촉진시킨다.
 - ③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은 어떤 사건의 윤곽을 피교육자에게 알려주고 그 해결책을 찾게 하는 방법이다.
 - ④ 시뮬레이션(simulation)은 업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피교육자가 그 상황에 대처해보도록 하는 방법이다.
- (답) ③ 감수성훈련은 구성원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조직발전기법 중 하나이다. ③지문의 내용은 사건처리연습(incident method)에 해당한다.

★ 2009 7급 선행정학 p.732

4.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 |
|---|
| ㄱ. 정치와 행정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 행정윤리의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ㄴ.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은 부정부패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윤리를 강조한다.
ㄷ.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재산등록 대상이지만 정부출연기 |
|---|

- 관의 임원은 제외된다.
 ㄹ. 공무원의 개인적 윤리기준은 공공의 신탁(public trust)과 관련된다.
 ㄴ. 행정윤리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업무와 관련된 윤리를 의미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ㄴ
 ③ ㄴ, ㄷ, ㄴ
 ④ ㄷ, ㄷ, ㄴ

(답) ② ㄴ, ㄷ은 틀리다.

- 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은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윤리를 담고 있다. 즉 이 법들에 담긴 내용들은 구체적인 규정이라기보다는 당위적이고 장식적인 당연한 행동규범이며, 민주성·합리성·자주성의 이념을 적극 실현하려는 규범이라기 보다는 하지말아야할 사항들만을 열거한 소극적 규정에 불과하다.
 ㄷ. 정부출연기관 임원도 포함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2009 7급 선행정학 p.965

5. 학습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학습조직은 유기적 조직의 한 유형으로서 전통적 조직 유형의 대안으로 나타났다.
 ② 학습조직의 보상체계는 개인별 성과급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③ 학습조직은 조직구성원에게 충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훈련을 강조한다.
 ④ 학습조직은 부분보다 전체를 중시하고 경계를 최소화하려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답) ② 학습조직에서는 개인학습보다는 집단학습을 중시하므로 개인별 성과급체계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업적에 대한 보상보다는 지식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시한다.

★ 2009 7급 선행정학 p.646

6.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원봉사자 방식은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는 방식이다.
 ② 보조금 방식은 민간조직 또는 개인의 서비스 제공활동에 대하여 재정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③ 구입중서 방식은 시민들의 서비스 구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④ 계약방식은 민간조직에게 일정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답) ④ ④는 계약방식이 아니라 면허방식(license)에 해당한다.

★ 2009 7급 선행정학 p.113

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지출의 내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세출의 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② 대규모 사업의 수행을 가능케 하는 재정규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④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을 의존재원으로 처리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형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답) ③ ③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전체세입중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만을 의미하므로 의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대 지방재정하에서 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나타내주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가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재정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하는 개념은 재정의존도이다.

★ 2009 7급 선행정학 p.1401

8. 델파이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대면접촉을 하지 않는다.
 ㄴ. 익명성이 유지되는 사람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한 판단을 조합, 정리한다.
 ㄷ.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자기 의견을 첨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ㄹ.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개인의 의견을 컴퓨터를 통하여 입력하고 각 개별 의견에 대하여 컴퓨터를 통하여 표결한다.
 ㅁ. 구성원 간의 성격마찰, 감정대립, 지배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독주, 다수의견의 횡포 등을 피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답) ① ㄷ, ㄹ은 델파이기법과 관계가 없다.

ㄴ. 브레인스토밍에 해당한다.

ㄹ. 델파이기법이 아니라 전자적 회의방식(electronic meeting)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목집단기법의 변형이다.

★ 2009 7급 선행정학 p.374

- ③ 가장 내용에 대한 자기검증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④ 종합적 재정 상태를 알 수 없으나 자동 이월기능이 있다.
 (답) ④ 복식부기에서는 자동이월기능(rolling-over)이 존재하므로 종합적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재정정보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 2009 7급 선행정학 p.1144

16 지방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은 것은?

- ㄱ. 지방세의 중요한 원칙으로는 응징성, 안정성, 보편성 등이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로는 주행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ㄷ. 자치구의 보통세로는 면허세, 재산세가 있다.
 ㄹ. 중앙정부는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다.
 ㅁ.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ㅂ.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ㅁ ④ ㄷ, ㅂ
 (답) ③ ㄴ, ㅁ은 틀리다.
 ㄴ. 주행세는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이다.
 ㅁ.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참고> 지방재정법 제1조 (지방채의 발행)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009 7급 선행정학 p.1403

17 정부규모팽창에 대한 이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전위효과 - 사회혼란기에 공공지출이 상향 조정되며 민간지출이 공공지출을 대체하는 현상
 ㄴ. 와그너 법칙(Wagner's law) -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대되는 현상
 ㄷ. 예산극대화 가설 - 관료들이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자기부서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 현상
 ㄹ. 파킨슨 법칙 - 공무원의 수가 해야 할 업무의 경중이나 그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현상
 ㅁ. 보몰 효과(Baumol's effect) - 정부가 생산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하락하여 정부 지출이 감소하는 현상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ㄱ, ㄷ, ㄹ, ㅁ
 (답) ③ ㄱ, ㅁ은 틀리다.
 ㄱ. 전위효과란 위기에 공공지출이 사적지출을 대신하며 재정이 팽창하는 현상을 말한다.
 ㅁ. 보몰병은 행정의 노동집약적 성격으로 재정규모가 팽창하는 병리적 현상을 말한다. 정부가 생산·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올라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몰효과라고도 부른다.

☆ 2009 7급 선행정학 p.67,105,

18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과주의 예산은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서 효과적이지 않다.
 ②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제1차 후버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 중의 하나이다.
 ③ 성과주의 예산에서 재원들은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배분된다.
 ④ 1990년대 이후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목표관리, 총체적 품질관리 등과 같은 혁신적인 방안이 추진되면서 부활된 제도이다.
 (답) ① 성과주의예산은 관리중심의 예산이므로 예산이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된다.

☆ 2009 7급 선행정학 p.1068

19 R.T.Nakamura와 F.Smallwood가 분류한 정책 집행의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책결정가는 명백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집행가는 이러한 목표의 바람직성에 동의한다.
 - ② 정책결정가와 정책집행가는 정책목표의 바람직성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을 같이 하지는 않는다.
 - ③ 정책결정가가 정책형성에 정통하고 있지 않아 많은 재량권을 정책집행가에게 위임한다.
 - ④ 정책집행가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책과정을 지배한다.
- (답) ④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의 모든 과정을 집행자가 장악하는 모형이다.

❖ 2009 7급 선행정학 p.449

20 정책딜레마(policy dilemm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호갈등적인 정책대안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 ② 정책대안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에 발생한다.
 - ③ 갈등집단들의 내부응집력이 강할 때 딜레마가 증폭된다.
 - ④ 새로운 딜레마 상황을 조성하는 것도 정책딜레마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 (답) ① 정책딜레마(policy dilemma)란 반드시 어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충되는 대안들 가운데 어느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상호 갈등적인 정책대안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하지만 대안들이 서로 상충적이어서 절충이 불가능하고, 갈등적 대안들을 함께 선택할 수 없으며, 대안들의 기회손실(opportunity loss)이 비슷하고, 갈등적 대안들을 대체할 방안을 찾을 수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②③④는 모두 옳은 지문이다.